

2024-09-04

율촌 입법 위클리

Yulchon Weekly Legislation Report

2024-20호 (2024년 9월 4일)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2024년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의 국회 발의 법률안 및 정부부처가 발표한 정책 동향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2024년 국회 국정감사가 10월 7일(월)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금융회사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임직원의 횡령 또는 배임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 실태 및 책임”과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확인된 판매대금 정산주기 문제와 관련하여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의 정산주기 실태”에 대한 검증이 특히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과 언론사의 주요 보도를 참고로 하여 기업이 주목해야 할 국정감사 이슈를 정리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권역별 CEO 등 현장 관계자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간담회를 필두로 여신금융업, 보험업, 증권업 간담회를 차례로 가졌으며, 저축은행업, 자산운용업, 상호금융업, 금융지주사 간담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간담회의 주요 목적은 4대 경제 리스크(가계부채, 소상공인 부채, 부동산 PF, 중소기업권 건전성), 기업 밸류업 등의 현안 및 금융산업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와 투자자 보호, 내부통제 강화 등도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8월 2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해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은 것이 「과소보호금지 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고,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보다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개선 입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간호법 체계를 정리하고 전문간호사 자격 등을 규정한 「간호법안」 등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주요 법률들이 통과하였습니다.

그 외 전체적인 입법 및 정책 동향은 본문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I. 위클리 포커스 **바로가기**

- Focus 1. 2024 국정감사 - 기업 관련 이슈
- Focus 2. 금융위원장 릴레이 간담회 - 금융업권별 주요 현안 및 발전방안 논의
- Focus 3. 헌법재판소 -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

II. [국회] 입법 동향 **바로가기**

① 본회의 의결 법안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간호법안(대안)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② 신규발의 법률안

- 주식회사·지배구조·주주권익보호 관련 법안
- 금융·보험·부동산투자사업 관련 법안
- 환경·탄소중립·에너지 관련 법안
- 전자상거래·온라인플랫폼·앱마켓 관련 법안
- 인공지능 관련 법안
- 미래형 이동수단·모빌리티·교통 관련 법안
- 의료사고 면책·보상 관련 법안
- 공정거래·표시광고 관련 법안
- 근로자 권익·근무조건 관련 법안

III. [정부부처] 정책 및 입법 동향 **바로가기**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블로그 등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 개선

Focus 1. 2024 국정감사 - 기업 관련 이슈

- 2024년 국회 국정감사가 10월 7일(월)에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국정감사는 원칙적으로 국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국정 운영을 대상으로 하며, 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또는 실무 책임자를 대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사안별로 국가 또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중대한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 임직원 등의 민간인에 대해서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출석하여 질의 응답에 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횡령 또는 배임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 실태 및 책임”과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확인된 판매대금 정산주기 문제와 관련하여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의 정산주기 실태”에 대한 검증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과 언론사의 주요 보도를 참고로 하여 올 국정감사에서 기업이 주목해야 할 이슈를 정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대상	이슈	세부 쟁점
정무위원회	주요 금융회사	금융권 내부통제	- 잇따라 발생한 주요 금융회사의 임직원 횡령 등의 금융 사고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태 지적 - 금융사 및 지주사의 친인척 부정대출 의혹
		대규모 투자손실 초래	- 홍콩 H지수 ELS 투자손실 원인 분석 및 향후 대응 실태 (불완전 판매, 과도한 판매압력, 금융당국 관리감독 부실, 지나치게 복잡한 상품구조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족, 시장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 등)
	인수합병 기업	인수합병 과정 문제점 및 주주권익 침해 여부	- 계열사 합병 과정, 주식교환 비율, 지배구조 변경 과정 및 절차의 적법성과 소액주주들의 이익 침해 여부
			-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시세 조정 의혹 및 주주가치 훼손 논란 - 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기업의 생성 여부
	플랫폼·이커머스	개인정보 유출	- 국내 페이먼트 회사와 중국 이커머스 회사간의 협업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의혹
		판매대금 정산주기	- 큐텐(티몬·위메프)발 대규모 미정산 지연사태 관련하여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주기 및 수수료 정책과 운영 실태
		알고리즘 조작	- 이커머스 플랫폼의 자사 상품 노출을 위한 알고리즘 조작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상임위원회	대상	이슈	세부 쟁점
기획재정위원회	주식회사 및 지주회사	계열사 부당지원 및 편법 세습	- 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및 편법 세습 의혹, 이를 통한 경영권 강화 시도
행정안전위원회	행정부처 및 행정전상망 관리기업	국가행정전상망 장애 및 책임소재	- 행정전상망 장애 및 반복의 원인 - 행정전상망 안정성 및 신뢰성에 대한 실태파악 여부 - 책임소재 불분명성 및 하청업체 책임전가 의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협회 등	체육계/협회 부조리	- 최근 불거지고 있는 체육계의 부조리 및 비리 문제 - 파벌 문제, 선수지원 차별, 행사 부실지원, 임원 및 감독 선임, 조직 관리 및 운영상 부정부패 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유전	심해유전 개발 사업성 및 투명성	-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명명된 동해 심해 유전·가스전 발굴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 높은 개발비용 대비 성공 가능성 - 해양생태계 파괴 및 오염 -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 및 전문성 논란
	유통·물류	사모투자회사 기업 매각 및 갈등	- 유통·물류회사를 사모투자회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각된 노조 갈등 - 사모투자회사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점포 폐쇄 및 사회적 책임 문제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사 합병 관련 갈등	항공사 합병 적법성 및 노조갈등	- 2대 항공사의 합병과정에서 불거진 논란 및 노조 갈등 - 합병 과정 중 인력감축 가능성과 이에 따른 합병 이후 경영 계획 및 노동자 보호 방안 - 독과점 심화로 발생하게 되는 시장지배력 강화 및 서비스 저하 가능성 - 해외경쟁당국 심사 등
환경노동위원회	제조업 물류업	물류업	- 2024년 5월 리사이클링 업체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의 운영관리상의 미비점 및 책임소재 - 물류센터 및 제조공장에서 화재와 안전사고가 재발되는 원인 및 안전관리 체계상의 문제점 - 하청 구조로 인한 책임소재 불분명성 - 안전관리 감독 및 모니터링 부족 문제 - 화재 및 폭염 등 재난대비 대응 매뉴얼 준비 및 외국인 근로자 대응 마련 실태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권	- 특수고용노동자 실태파악 및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 여부 (안전, 기후대응, 건강, 노동강도, 복리후생, 소득안정성 등) - 특수노동자 노조결성 방해 및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

Focus 2. 금융위원장 릴레이 간담회 - 금융업권별 주요 현안 및 발전방안 논의

- 금융위원회는 2024년 8월 20일부터 금융권역별 CEO 등 현장 관계자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을 필두로 여신금융업, 보험업, 증권업 간담회를 차례로 가졌으며, 저축은행업, 자산운용업, 상호금융업, 금융지주사 간담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 이번 간담회의 주요 목적은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4대 리스크(가계부채, 소상공인 부채, 부동산 PF, 중소기업권 건전성), 기업 밸류업 등 현안 및 금융산업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와 투자자 보호, 내부통제 강화 등도 함께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1. 은행권 간담회 주요 발언 (2024.8.20)

① 가계부채 관리 강화

-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가 2분기부터 증가세로 전환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은행권의 선제적 관리를 당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조치 계획을 설명

② 소상공인 부채 관리

- 소상공인 대출잔액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말에 비해 약 380조 원 증가했음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명, '차주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할 것을 제안

③ 혁신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

- 은행권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모델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어갈 것을 촉구. 은행권의 혁신 노력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는 방침

④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 강조

- 최근 은행의 내부사고 이슈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시스템의 전면 재점검을 당부. 2025년 1월 시행 예정인 책무구조도를 내부통제 강화의 전환점으로 삼을 것을 제안

2. 여신전문금융업권 간담회 (2024.8.22)

① 카드업 관련 논의사항

- 금융위원장은 카드업권이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지급결제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당부
-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의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 및 2차 이하 PG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 계획 언급
- 카드업권이 빅데이터 시대에 가장 앞서 있는 금융 분야임을 언급하며,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통해 혁신적 결제 및 맞춤형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제안

② 캐피탈업 관련 논의사항

- 캐피탈업권에 부동산PF 연체채권 등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PF 사업성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와 자본확충 등을 통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보를 요청

2. 여신전문금융업권 간담회 (2024.8.22)

② 캐피탈업 관련 논의사항

- 캐피탈업권이 구독·공유경제 친화적인 물적 금융 영업 노하우를 토대로 다양한 금융·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확대 및 관련 규제 개선 검토 계획을 언급

③ 신기술사업금융회 관련 논의사항

-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벤처투자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원활한 민간 자금 공급, 중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자본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 측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

3. 보험업권 간담회 (2024.8.28)

① 보험산업의 신뢰 회복 및 국민경제 기여방안 모색

- 보험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다발산업이라는 오명 등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신뢰가 낮은 점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
- 보험산업이 장기시계의 투자자인 만큼 안정적·장기 자산운용을 하면서도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예를 들어,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

②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구축 및 리스크 관리 당부

- 민원감축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차질없는 준비를 당부
-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최우선 순위로 추진할 것을 강조
- IFRS17 관련 개선과제는 10월 보험개혁회의에 상정하고 2024년 말 결산부터 적용할 계획
- 금리인하에 대비한 건전한 수익증대 및 부채관리 등 리스크 관리 강화를 병행할 것을 당부

③ 판매채널 혁신 및 향후 방향 언급

-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보험회사에 판매채널 관리책임 부여 등도 검토 중임을 언급
- 플랫폼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경우 보험료 체계 등 현황을 전면 재점검 계획
- 생애 전반의 토탈 서비스 제공자로 보험의 역할 확대를 제안
- 보험업권의 신탁 활성화, 생명보험금 유동화 방안 등을 업계와 함께 검토할 계획을 언급하며,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투자처 발굴을 당부

4. 증권업권 간담회 (2024.8.29)

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논의

- 자금중개자이자 기관투자자로서 밸류업 기업의 자금 흐름을 이끌어 나갈 것을 당부
- 기업 가치 분석·평가 및 투자 판단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 제공 역할을 요청

② 기업금융 강화 논의

- 증권사가 종합 기업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조
- 혁신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 성숙기업에 대한 자금과 M&A 지원 등 맞춤형 금융 제공의 중요성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의 재평가 및 개선 방향 논의 계획을 언급

4. 증권업권 간담회 (2024.8.29)

③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 강화

- 유동성·건전성 관련 선제적·철저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증권업계의 부동산 PF 등 당면한 리스크의 신속한 안정을 위한 노력을 요청
- 불법·불공정 문제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 대응할 계획
-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장치 재점검 등을 당부

관련자료

[보도자료]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은행권(08.20) [바로가기](#)

[보도자료]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여신전문금융업권(08.22) [바로가기](#)

[보도자료]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보험업권(08.28) [바로가기](#)

[보도자료]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증권업권(08.29) [바로가기](#)

Focus 3. 헌법재판소 -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

-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현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해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은 것이 과소보호금지 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고,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해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보다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개선 입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1. 본 위헌소송의 의미

- 본 소송은 시민단체와 청소년, 영유아가 제기한 헌법소원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가 법령 및 행정계획으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충분한지를 다툰 것입니다.
- 이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이라는 점,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나선 미래세대의 기본권 관련 소송이었다는 점, 헌법재판소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국내외 다른 기후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헌법재판소 결정 주요 내용

<p>헌법불합치</p>	<p>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p> <p>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해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은 것이 과소보호금지 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고,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해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2026년 2월 28일까지 개선입법 시한을 정함. 이에 따라 정부는 2031년 이후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해야 함.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과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되어, 현재의 단기 목표는 유지됨 <p>과소보호금지 원칙</p> <p>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p>
<p>기각</p>	<p>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p> <p>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2030년까지의 중장기 감축목표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전제로 한 중간 목표에 해당한다고 판단 <p>‘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중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판관 기각 4명, 위헌 의견 5명으로 기각 위헌의견이 다수였으나, 헌법소원 인용에 필요한 심판 정족수(6인)에 미달하여 기각됨
<p>각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녹색성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항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중 재정기획 공동심판참가 신청 및 보조참가 신청

① 본회의 의결 법안(2024년 8월 28일)

법률안	주요 내용
<p>본회의 의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03266 / 법제사법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관한 규정을 삭제 상속권 상실선고에 관한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함.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인의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 절차를 간소화.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
<p>본회의 의결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202754 / 법제사법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등기사무의 효율성을 제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 신청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기업 관련)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를 간소화하여,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여 등기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 등기관이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이의신청인의 편의를 증진
<p>본회의 의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익의원 등 17인) 220077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게,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 구체적으로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관련 물건·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p>본회의 의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2인) 220037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대해 공장이나 창고의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과 확충에 관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법률안	주요 내용
<p>본회의 의결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03268 / 정무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함 • 금융위는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 6개월 전까지 금융업권별 현실을 반영해 차등화한 예금보험료율 한도(안)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
<p>본회의 의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03269 / 정무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한정하여 출연 비율을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은행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추가로 출연하도록 함
<p>본회의 의결 간호법안(대안) 2203286 / 보건복지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으로 규정 •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함 • 간호사등은 적정할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담함을 규정 • 국가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p>본회의 의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03263 / 국토교통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중 임차보증금의 한도를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이중임대차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공공위탁관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파산선고를 받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례를 마련

② 신규발의 법률안

주식회사·지배구조·주주권익보호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2202945 / 정무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입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게 함

법률안	주요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2202970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시 주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배주주에게 유리하고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합병비율이 결정되는 문제가 있음 • 합병 등의 가액을 결정할 때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되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2202974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 조치를 도입하여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김남근의원·신장식의의원·한창민의의원 등 34인) 2202991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여,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합병, 회사분할, 사업기회 유용 등의 행위에 대해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 이사회 1/3 이상을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로 구성하도록 하며,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함 • 상장회사에 대해 전자주총을 의무화하고, 주주제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참여와 제안을 활성화 • 임원에 대한 과도한 보수 지급을 제한하고 적절한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을 강화하며,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이를 소각하도록 함 • ESG와 관련하여 “세이온페이” 제도(보수정책 및 보수보고서 주주총회 심의)와 “세이온클라이밋” 제도(기후변화 대응 계획 주주총회 승인)를 도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2203215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법인은 기업 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하도록 하고, ESG 정보 공시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제적 표준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금융·보험·부동산투자사업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2203375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세조종행위 및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를 하여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거래 정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3인) 2203036 / 법제사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금청구권자가 청구권 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알 수 있었을 날부터 3년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는 등 보험금청구권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

법률안	주요 내용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오세희의원 등 21인) 2203181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제한,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계약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 •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최소 5년으로 하며, 5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5년으로 간주하고, 상품권 발행금액의 50% 이상을 발행보증금으로 공탁하거나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함 •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에 대해 발행자는 일정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여 상품권이용자의 피해보상 등에 사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2202957 / 국토교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개발 단계에 적합한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하고, 리츠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 등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전담 지원기구인 리츠지원센터를 설립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2203277 / 국토교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하고, 주식공모 시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주식 분산 시기를 공모 시점으로 함

환경·탄소중립·에너지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1인) 2203252 / 환경노동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훼손·해체·변경·임의설정 등의 금지행위 대상에 건설기계를 포함함 •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제품(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의 수입·판매를 금지 •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제품을 수입·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러한 제품을 판매중개 또는 구매 대행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의원 등 12인) 2203291 / 환경노동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환경성적표지'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와 유사한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여 국가 간 상호인정 가능성을 제고 • 환경발자국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사원 보유 기준을 2명 이상에서 상시 근무하는 심사원 5명 이상으로 강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의원 등 11인) 2203120, 2203122, 220312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석유화학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 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자원 중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 투자계정의 세출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금액은「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법률안	주요 내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4인) 220341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시 계획 관련 조항을 정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등록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며 사후관리의 근거를 마련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효율측정, 신고 등 의무사항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1인) 2202962 / 기획재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배출저감시설 및 탄소포집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상향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2인) 2203048 / 기획재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에서 제외

전자상거래·온라인플랫폼·앱마켓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2202941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소비자의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의무화 정산기한을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불하도록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의원 등 11인) 2202954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를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 사업자로 구분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경우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리콜 명령 대상자의 리콜의무 이행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정부가 직접 리콜 관련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완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203012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동의의결제'를 전자상거래 분야에도 도입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오세희의원 등 20인) 2202983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서비스 이용 조건 등을 공시하고, 연간 사업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재화 등 판매대금을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결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

법률안	주요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2인) 220302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앱 마켓 등을 설치, 이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인공지능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인공지능책임법안(황희의원 등 10인) 220323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 이용자의 권리를 규정 고위험인공지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용자에게는 설명요구권과 이의제기권을 부여
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220329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인공지능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정보를 게재하려는 자에게는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표시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
인공지능 기본법안(한민수의원 등 10인) 220307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의 지원 근거 및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대한 확인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를 요구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는 인공지능 운용 사실을 고지·표시하도록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23인) 220332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표시방법을 지키지 않은 정보를 탐지하고 삭제하는 등의 유통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함 정보를 게재하려는 자에게는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표시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

미래형 이동수단·모빌리티·교통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220312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법에서 정의하는 '자동차'에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의 '이륜자동차'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함

법률안	주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0인) 2203391 / 기획재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전략기술로 규정되어 있는 '미래형 이동수단'의 범위에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0인) 2203201 / 국토교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법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로 제한되어 있어, 대부분의 승차구매점(드라이브쓰루)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승차구매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규모 제한을 배제

의료사고 면책·보상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2203411 / 보건복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불가피하였고 회피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3인) 2203412 / 보건복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법 상의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범위인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외에도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도 피해를 보상하도록 확대

공정거래·표시광고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2203028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 법률에 산재된 공정거래 분쟁조정과 관련 규정을 하나의 법률에 통합 모든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의 신청 및 의뢰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고,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모든 공정거래 관련 분야의 분쟁에 도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4인) 2203082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법은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내부거래의 주요 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지정기준은 2009년에 도입된 것으로 성장한 경제 규모를 반영하여,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3%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기준을 변경(국내총생산액과 연동)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3인) 220314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실상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준대규모점포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규제대상에서 제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중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등이 점포 개업에 드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도록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3인) 2203132 / 보건복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식품등의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위법 표시·광고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근로자 권익·근무조건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2203021 / 국토교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간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택배사업자가 영업점의 위탁구역을 회수하는 문제로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일자리를 잃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2203246 / 환경노동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2배 이내 금액을 지급할 것을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면책범위를 축소

시행령·시행규칙 의결 및 입법예고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 / 2024-08-27

예고 일자	2024-08-28 ~ 2024-09-19
주요 내용	<p>체육교습업에 대한 가격표시제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체육교습업(수영, 축구교실 등)도 가격표시제 대상에 포함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 등록신청서, 광고에 표시해야 함 <p>적립식 여행 상품(크루즈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정보를 사업장 게시물(홈페이지), 상품설명서, 계약서, 광고에 모두 표시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총 고객환급 의무액,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자산,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블로그 등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 개선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 / 2024-08-20

예고 일자	2024-08-20 ~ 2024-09-09
주요 내용	<p>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위치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공개하도록 변경 기존: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 가능 <p>경제적 이해관계의 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매링크를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추후 대가를 받는 경우 직접 구매한 상품에 대한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경우 변경 이유: 최근 유행하는 SNS 마케팅 유형을 포함하여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함 <p>부적절한 표현 예시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을 부적절한 예시로 추가

입법지원팀

기업의 규제환경이 복잡하게 변화함에 따라 규제 및 입법에 대한 기업의 적절한 대응이 보다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율촌의 입법지원팀은 이러한 기업의 규제 및 입법 대응을 위한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법령 및 행정규칙, 지자체의 조례, 관계부처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에 존재하는 다양한 규제에 대한 해석과 제개정, 사안별 적용 여부 분석과 함께 개별 부처 또는 유권해석 기관 응대를 통한 규제 대응 방안, 국회 국정감사등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제안해 드립니다.

또한 상시적인 입법·정책·규제 모니터링을 통하여 고객별 산업별 동향을 파악하여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생성되지 않도록 전문 입법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촌의 입법지원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의 고위 관료 출신 변호사와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규제 및 입법 대응 전문팀으로, 풍부한 네트워크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별 최적의 대응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변호사



이강민 변호사



박지웅 변호사



장재형 사무사



구기성 고문



김동석 수석 전문위원



최준영 수석 전문위원



윤여훈 전문위원